

# 개혁특위 열자마자 공천권 싸움

## 민주당, 총선 공심위 구성·발족 시기 놓고 계파간 신경전

### 당권·대권 경쟁 결정적 영향... 진통 예고

2012년 4월로 예정된 19대 총선에서의 공천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민주당 각 계파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특히, 국회의원 공천을 다루는 공천심사위 구성과 발족 시기는 현 지도부와 차기 지도부의 위상은 물론 당내 대권 경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의는 지난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천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천분과위원장인 문학진 의원은 ▲공천심사위 구성 및 활동은 지도부 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기 총선 후보는 조기 공천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문 의원은 또한 “공심위는 내년 12월에서 다음해 1월 사이 구성해야 한다”며 “당권과 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내년 12월19일 이전 대선에 나갈 지도부는 사퇴하게 돼 있으므로 공심위 구성을 현 지도부가 할지, 차기 지도부가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세균 최고위원과 가까운 최규성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에 나갈 현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면 줄 세우기 문제가 대선후보 경선에

공정하게 안된다”며 차기 지도부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선 공천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정동영 최고위원 측의 정청래 전 의원은 “현 지도부가 미리 미리 객관적으로 공심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다음 지도부로 공천권을 넘기면 지금 지도부는 허바지가 된다”는 반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천정배 위원장은 추후 제논의 하자며 논의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공심위 구성 시기 등 19대 총선 공천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심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당권 및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개혁특위에서는 오는 2월말까지 공심위 구성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개혁특위에서 벌써부터 공심위 구성 및 시기 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공

천심사위 구성 및 발족 시기는 당내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지도부가 정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공심위 구성 등이 논란으로 부상하는 것은 대외 투쟁을 위한 내부 동력을 모으고 있는 민주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개혁특위는 19대 국회의원 공천 시기와 관련, 선거일 60일 이전 안과 후보 등록 30일 이전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대 총선 공천은 2012년 2월 10~22일25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B독재 심판 국민과 함께 합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9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여야 ‘천정배 발언’ 공방 격화일로

## 김무성 “궤변으로 국민까지 욕보이는 망언”

## 손학규 “안상수 ‘실언 파동’ 덮으려는 꼼수”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의 장외집회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 천 최고위원은 ‘패륜아’, ‘인격 파탄자’라고 맹비난하며 정계은퇴를 요구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29일에도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예산안 파동과 ‘보은병’ ‘자연산’ 발언 파동을 뒤집을 수 있는 호재를 만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 대표의 ‘실언 파동’을 덮으려는 꼼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대반격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보은병 포탄을 갖고 군을 비하하고, ‘홀몸통 자연산’ 발언으로 전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 한 한나라당 대표는 어떻게 됐나”면서 “한나라당은 먼저 모범을 보여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닮고 있다”며 “보은병·자연산’ 발언은 관공로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는 천 최고위원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난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정의란 무엇인가’라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재정권 말기가 가까워지면 총선경쟁이 극심해진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과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에 그러했다”면서 한나라당의 공세를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치부했다.

손 대표는 이어 “천 최고위원의 발언은 흔히 하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마치 천 최고위원이 ‘이명박 죽여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보은병 포탄을 갖고 군을 비하하고, ‘홀몸통 자연산’ 발언으로 전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 한 한나라당 대표는 어떻게 됐나”면서 “한나라당은 먼저 모범을 보여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닮고 있다”며 “보은병·자연산’ 발언은 관공로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는 천 최고위원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난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정의란 무엇인가’라

는 책을 정말 잘못 읽은 것”이라고 했다.

천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사과할 이유가 없으며, 3년간 날치기하고 민주주의를 부인한 사람들과 이 대통령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으며 몰고 말쑥한 4대강을 파헤쳐 생명을 죽이는 살인·살생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선고를 내려야 마땅한 정권”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형님예산·여사님 예산에 이어 안상수 대표의 자연산 망언으로 여론이 안 좋아 지니까, 이를 전환해 보려고 야당 최고위원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쓸 데 없이 야당의원의 접점을 비판 발언을 몰고 늘어지는 ‘오버’를 중단하고 왜 국민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부터 먼저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CT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된다

### 장병완 의원, 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광주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복합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CT연구원은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CT연구원의 설립, 구체적 연구대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지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CT연구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지난 2월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광주 설립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2011년 설계용역비 예산 42억원 반영을 기대했으나 CT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역 삭감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직권상정제한법 발의키로

###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 세우기’는 2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최종 마련해 이르면 내년 1월3일께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직권상정제의 대안으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했다.

특히 상임위 심사배제의 의결 요건을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 찬성 쪽으로 결론을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軍, 합동군사령관 신설한다

### 육·해·공군사령부 창설

현재 합참의장보다 막강한 권한으로 육·해·공군사령부를 지휘할 합동군사령관(대장)이 신설되고 육·해·공군본부는 육·해·공군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해 5개섬 방어를 위한 서북해역사령부(가칭)가 창설되고 북한 공격에 대비해 서해 5개섬을 조기에 요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장관 등 주요 직위자, 국방선진화추진위원, 민간 전문가,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현재 합참의 합동전략기획과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이란 두가지 기능 가운데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 기능을 전담하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장급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참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이대통령 “6자회담 통해 북핵폐기 달성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목표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여전히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 중단과 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평도 도발 이후 이 대통령이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

는 점에서 회담재개를 위한 변화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북 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통일에 대한 외교적 지지기반 확보를 외교통상부의 ‘3대 역할’로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 받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며 “평화적 통일이 남북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전출산 극복!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 아기의 우렁찬 탄생의 울음소리는 “미래 녹색 전남”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한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녹색의 땅 전남